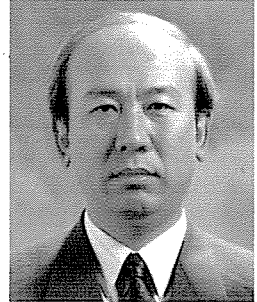


과학기술 전문가 왜 발탁하지 않는가

韓 胎 龍

〈경희대 자연과학대교수 / 유전공학〉



UR시대, 극복의 지혜를

우루과이라운드(UR) 국회비준을 앞두고 공업, 농업, 금융업, 서비스업,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에 걸친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이를 어떻게 타결해 나가느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대기업,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진흥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고 핵심과학기술의 확보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발 맞추어 정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21세기 초까지 선진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요건으로는 투자재원의 확보, 연구기자재, 도서정보 등 연구기반시설의 확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선 국가의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들 수 있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국가의 확고부동한 정책이 없다면 인력과 재원의 낭비는 물론 국가경쟁력의 상실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은 뻔한 사실이다.

훌륭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을 아는 이공계 전문가를 우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 정당 등 국가요직에 과학기술전문가가 발탁되는 예는 극히 드물었다. 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임원급 이상의 대부분은 상경계 등 인문사회계 출신들

이 차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 봄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원급 인사에서 처음으로 이공계 전문기술자가 인문사회계 출신을 앞지르고 발탁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이것은 과거 과학기술이 도외시되던 경영인 시대에서 기술을 겸비한 전문경영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정부 관료들은 어떠한가? 장관급 이상 정부 고위직중 과기처장관을 제외하면 이공계 출신은 거의 없었다.

1급 비서관 한명도 없더니...

과기처장관조차도 얼마전까지 언론인 출신이었음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상공자원부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이공계 출신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은 청와대도 마찬가지여서 청와대의 1급 이상 비서관중 이공계 출신은 단 한명도 없다고 한다. 과학기술 대통령을 자부하고 있는 金泳三대통령의 측근에 과학기술 전문가가 전무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민자당, 민주당 등 각 정당도 같은 사정이다. 과학기술진흥을 소리높여 외치는 정치가, 대통령에게 수시로 과학기술정책을 보좌해야 할 청와대 비서관, 이를 뒷받침하고 실천해야 할 정부부처의 요직에 과학기술전문가가 아예 없거나 이들이 핵심부서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이 얼마나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UR로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농수산분야, 세계 30위권으로 대만, 이집트, 브라질 등에도 뒤지는 기초과학 수준 등은 이를 잘 반증하는 사례로 여겨진다.

비교우위와 투자수율 등 경제논리에만 치중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제관료들의 눈에 식량안보는 그만 두더라도 환경, 생태 등 국민복지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농림, 수산업이 눈에 들어올 리 없으며 지금 당장의 산업응용과 생산에 무관한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인식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는 물론 각 정당에서도 과학기술을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과학기술전문가를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들을 적극 참여시켜 훌륭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참신한 정책, 뿌리서 찾아야

과학기술 발전의 두번째 요건으로는 우수한 인력확보를 들 수 있다. 많은 정치가 또는 행정관료들은 투자만 많이 하면 과학기술이 저절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이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나 연구를 수행할 우수한 연구인력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투자가 있어도 훌륭한 연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전문과학기술인력은 하루 아침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장기적인 투자와 인내심이 필요하다. 전문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곳은 물론 국내외의 대학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로 해외에서 양성된 소위 유학과 과학기술자를 초빙하여 각 대학 및 연구소의 주요 인력으로 확보해 왔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학문이 해외에 종속되어 있음을 천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물론 그동안 국내의 과학기술수준은 거의 전분야에 걸쳐 대단히 취약하여 우수한 인력양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서울대, 과기원 등 몇몇 대학을 제외하면 연구시설, 연구수준 등 어느 것으로나 국제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다. 그러나 당장 모자란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고급과학기술인력을 해외에 의존할 수 없다. 국내의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가 많아지고 이들의 수준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다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저절로 국제적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웃 일본의 예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력은 우

리손으로 기르고 이들을 우대한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고려대학교에서 앞으로는 국내에서 양성된 인력을 중심으로 신입교수를 공채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크게 고무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연구하는 대학」 지원 급하다

훌륭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우수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대학 및 대학원 교육제도 개선을 들 수 있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사항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1백여개 대학에 대학원이 개설되어 있으며 10만여명(석사과정 8만여명, 박사과정 2만여명)의 대학원생이 재학중이다. 이는 숫자면에서 일본, 영국, 중국 등과 비슷하여 양적으로는 크게 팽창되어 있다. 이들 국가의 교수 수가 우리나라의 3~30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대학원 교육이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원 정원중 대부분은 전문대학원(석사과정 4만여명), 인문사회계 또는 의학계로서 이공계분야 대학원 정원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공계분야 교수와 대학원생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다. 이공계분야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대대적인 연구시설, 도서 및 연구지원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공립대학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IBRC, OECF 등 차관사업을 통해 부족하나마 상당한 연구기자재가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은 국내 유수의 사립대학들조차 재정이 극도로 빈약하여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연구기본시설을 갖추기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의 연구기본 시설마련에 국가적인 절실한 투자가 요망되며 연구비 재원의 일부는 연구기자재 구입에 쓸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UR타결로 인한 교육개방을 앞두고 각 대학들은 앞다투어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21세기를 대비하고 있으며, 교수업적평가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등 경쟁하는 대학풍토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대학이 연구와 인력양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